도의회 광장

2021 07 제75호

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전화** 064)741-2285 | **팩스** 064)741-2239 | www.council.jeju.kr ISSN 2671-9754

02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특집

04 제397회 임시회 본회의

05/07 주요활동

08 생생 의정활동

10 함께합시다

12 사무처 소식

아! 시원하다. **더위야 물렀거라** 서귀포 동쪽 해안에 위치한 정방폭포. 폭포수가 바다로 떨어지는 유일한 곳이다. 도민과 관광객의 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기세다. 아름다운 비경을 뽐내는 이면엔 제주4·3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라 옷깃을 여미게 한다.

"삶의 터전 지키려 한 강정 주민 광복절 특별사면 요청"

제397회 임시회 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7회 임시회가 7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본회의에서는 위원회 활동기간 6개월 연장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주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9개 안건을 처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폭염 속에서도 방역 마스크와 장갑조차 제대로 한 번 벗지 못한 채 방역 최일선에서 사명감 하나로 코로나와 사투하며 고생하고 있는 방역진과 의료진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다."며 폐회사를 시작했다.

이어 좌남수 의장은 "삶의 터전인 강정마을을 지키고자 했던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하다 처벌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좌남수 의장은 "범죄자로 내몰리면서 기소된 253명 중 사면자는 39명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주민들까지 모두 사면돼야 강정마을의 고통 치유와 갈등 해결을 위한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곧 광복절이 다가온다. 강정 주민의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대통령 임기 마지막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명단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사면 결단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특집

“지방의회 부활 30년,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7월 5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의회는 1952년 5월 10일 실시된 지방선거로 초대 의원 20명이 선출돼 같은 해 5월 20일 개원했다. 당시 초대 의석에는 자유당 7석 대한 청년당 4석 국민회 3석 무소속 6석 등 총 20석으로 구성됐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부 포고령으로 강제 해산됐으나 1991년 7월 8일 4대 의회로 부활한 후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이날 기념식 행사에는 역대 도의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 30년간의 의정활동을 담은 30주년 영상물 상영, 30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경과보고, 유공자 감사패 수여, 기념사 및 축사,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좌남수 의장은 “지방의회가 올해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실현하여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 열자” 제주도-도의회 ‘맞손’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공동 행보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머리를 맞댔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7월 1일부터 5일까지 다양한 기념행사를 공동주최했다.

올해는 특별자치도 출범(2006년) 15주년이 되는 해이자, 지방의회 부활(1991년)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방자치 발전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올해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과 세미나 등을 공동 개최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성과와 개선점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7월 1일 오전 9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과 민선 6·7기 7주년 기념행사가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및 민선 6·7기 7주년의 성과와 개선점을 돌아보고, 도정 발전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 등이 진행됐다.

2일 오후 1시에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 자치분권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과 함께 향후 고도의 자치권 확보 전략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5일에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가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역대 도의회 의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 부활의 의미를 돌이켜 보고,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다.

제11대 후반기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 개최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가 후반기 개원 1주년을 맞이했다.

제11대 의회 후반기 의정은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낮은 자세로 더 다가가는 민생의정', '대화와 토론이 상존하는 소통의정', '제주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의정'에 힘쓰면서 도민들의 성실한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뛰는 1년을 보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7월 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1대 후반기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방역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여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담은 1주년 영상물 상영과 의정발전에 공이 큰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 좌남수 의장 인사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좌남수 의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는 회기 일수 확대, 의원 및 사무직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도민과 눈높이를 맞춘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 1년간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제2공항 갈등 해소 지원 및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장애예술인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앞으로 남은 1년여간의 후반기 의정활동 기간동안 지난 1년의 미흡한 점을 반성하고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분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기 박호형 의원 위원장 선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일 대회의실에서 제396회 정례회 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갑 선거구)을, 부위원장에는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선거구)을 선출했다.

이에 앞서 제39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예결위원 15명을 선임했다. 이번에 선임된 위원들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예결위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박호형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앞으로 1년간 제주도와 교육청의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며, "예결위원님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호형 신임 예결위원장은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도민안전방역단 단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주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 50선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조례에 담긴 지난 30년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제주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 50선」을 선정하고, 책자로 발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조례 50선을 선정하기 위해 전문위원실의 추천과 후보군 예비조사를 거쳐 학계와 언론계 등 내·외부 전문가 총 9명으로 조례 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1991년 지방의회 부활부터 현재까지 제주도의회(1991년~2006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2006년~2021년 현재까지)에서 심사하여 제·개정된 조례 중 분야별로 도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준 조례 50선을 선정했다.

제11대 후반기 의회 1주년 주요 성과

1.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

- **회기 운영 탄력성·효율성 확보 및 상시 일하는 의회상 정립**
  - 2020년 120일 → 2021년 137일(17일 증가)
  - * 조례상 연간 회의일수 확대: (기존)130일 이내 → (변경)150일 이내
- **11대 의회 후반기 의정 회기 운영**(13회, 총 143일)
  - 조례안 제·개정 278건, 예산 및 결산 승인 13건
  - 동의안 251건, 청원 10건, 진정 53건

2. 조직 개혁, 역량 강화를 위한 의회혁신기획단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개정**
  - 도의원의 인사청탁·성희롱·사적노무 요구 금지를 명시하여 청렴하고 성평등한 모범적인 의원상과 신뢰받는 의회 정립
- **「의회사무처 공무원 외부 강의 허용 기준」 정립**
  - 회기 및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의 외부강의 자체통제를 통해 의정활동 지원 강화 및 집행부 견제 시 공정성 담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 연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 습득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활동 기준 마련

3. 낮은 자세로 더 다가가는 민생의정

- **본회의장 의장석 단상 높이 조정(⇩50cm)으로 「낮은 자세로 더 다가가는 민생의정」 실천 의지 반영**
- **장애의원을 배려한 의석 배정, 본회의장 이동 경사로 및 전동 발언대 설치**
-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의정활동 수어방송 확대 운영**
  - (종전) 본회의, 도의회 인터넷 방송
  - → (확대) 본회의 + 상임위원회 회의, 도의회 인터넷 방송 + KCTV 생중계
- **도민 접근성 강화 및 이용 편의를 위해 전자회의록 기능 개선**
- **도민에게 고품질 회의영상 제공을 위한 방송시스템 고도화**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근거 마련
  - 발달장애인의 돌봄대책과 생애주기별 발달장애 TF 구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약품 오남용 현황점검과 예방 정책 마련 등

4. 대화와 토론이 상존하는 소통의정

-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초석 마련**
  - 4·3 단체 및 유족 등과 소통하고 국회 앞 1인 시위 등 지원
  - 4·3특별법 개정촉구 동의안 전국 시·도의회 방문하여 개정 촉구 결의안 건의문 채택 전국 확산
  -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기관 협력망 구축
  -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 및 국회방문
  -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기자회견 및 국회 1인 시위 참가
  - 4·3특별법 국회통과 염원 사진전 및 시화전
  - 경기도의회 아트센터 제주4·3〈봄이 왐수다〉공연 및 전시 개막행사 참석
-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활동 전개**
  - 강정 지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용도 변경
  -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에 사면복권 건의,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마련 지원, 기록사업 지원 등 강정주민 치유 지원 사항 추가
-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 제주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활동 전개**
  -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철회 성명서 발표 및 국회 방문을 통해 신규특허 지정 유예
  -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마련
  - 코로나 상황하에서 소상공인 지원, 웰니스 관광, 공연 및 이벤트 관련 업종 종사자 의견 청취,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논의
  -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 정책기금 부담금리 인하, 지원업종 및 한도 확대, 융자규모 확대 및 상환 유예
- **제주 1차 산업 보호를 위한 활동 전개**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제주도의회 결의안 채택
  - 제주형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개선요구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2021년 상반기 양배추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관리제도 발령 유도 및 차액지원을 통해 가격안정에 기여
-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전개**
  - 도민사회 내 치유불능의 갈등해소를 위한 가교적 역할 수행
  - 제2공항 관련 쟁점 해소 및 심층 토론 등으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 청와대, 국회 및 국토교통부와의 협상당사자로써 역할 수행
- **도의회-도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한 소통 전개**
  - 포스트코로나 대응 방역·경제 회생 방안 협의
  - 제주형 뉴딜 T/F 구성 운영 협의
  - 개발공사 유보금 활용한 재난지원금 지원 제언
  -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제주유치 제언
  -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공동 노력 협의
- **도민과 양방향 소통 위하여 SNS 활용 온라인 홍보활동 확대**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플랫폼 소통창구 다각화
  - 카드뉴스, 의회 잇수다, 의회 톡톡 등 공익형 동영상 콘텐츠 확대 제작(제주어, 수어, 인권, 청소년 참여 등)
  - 조례 발의 의원 인터뷰 및 홈페이지 연계 동영상 표출
- **지역현안 해소를 위해 주요 사업장 등 현장방문: 41회 78개소**
- **도민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72회**
- **적극적인 중재와 소통강화로 학부모 불만사항 해소**
  - 공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대구 IB 교육현장 방문
  - 방과후 강좌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 → 수강인원에 관계없이 방과후 강좌 운영 및 예산 지원
  - 위탁급식 현안 해결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 **교육공무직 고충상담 및 의견 제시 강화**
  - 교육공무직 운영 현황 및 과제 모색 간담회 개최
    - → 기관 구성원 소속감 부여 및 공동체 의식 함양 기여

5. 제주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의정

-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원 입법 발의**
  - 조례안 총 건수의 71% 점유, 10대 의회 동기 대비 87% 증가
  - * 조례안 접수 총 278건 = 의원발의 196건(71%) + 집행부제출 82건(29%)
  - * 10대('16. 7. ~ '17. 6.) 105건 → 11대('20. 7. ~ '21. 6.) 196건
- **전국 광역의회 최초, 비대면 본회의 운영시스템 도입**
  - 집합회의 곤란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각 의원실 비대면 본회의 표결시스템 구축
    - → 중단없는 본회의 운영시스템 마련으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 강화
- **정책개발 역량강화**
  -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 및 분석을 통한 구체적 방안 제시
  - 지역 현안연구 및 이슈분석을 통한 정례보고서 발간 (총3권)
-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동**
  -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14개 의원연구단체 운영
  - 토론회 34회, 연구용역 12건, 조례 제·개정 1건
- **적극적인 입법활동 전개**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조례 633건 분석·평가
  - 공동연구·정보공유·인적소통 활성화를 위한 국회입법조사처와 MOU체결
- **제주 교육정책 방향 제시**
  -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환경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
  -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및 고교체제 개편 진단과 발전 방안
  - 아이들과 함께하는 제주목관아 활용 운영 방안 제도개선
  - 학생의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약물 예방 교육 방안
  - 관내 학교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 방안

개회사

“코로나19 4차 대유행…도정과 의정 안정 운영 절실”

제397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7월 14일 “원희룡 제주지사의 사퇴에 대한 갖가지 얘기로 시국이 어수선하다”라며 “도정과 의정의 안정적인 운영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3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좌남수 의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도내 의료기관에의 무면허자 백신접종 실태까지 알려지며 도민사회 불안도 커지고 있다”라며 “도민건강과 안전이 중요한 만큼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좌 의장은 “최근 제주도개발공사 내 삼다수 무단반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도민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다”며 “조사과정에서 한 치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되고, 형식적인 사과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조직 기강 확립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좌 의장은 이어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공무원 파견으로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단 이사장이 책임경영을 포기한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특히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이미 13개소나 되지만 제주도는 향후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2개 기관을 추가 설립할 계획”이라며 “추계된 소요 재원만도 5년 동안 667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자·출연기관이 늘고있는 만큼, 도나 유관기관 간에 중복된 기능은 없는지, 기관별 설립 목적에 맞도록 주요 사업과 조직·인력이 제대로 검토된 것인지 철저히 심사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출자·출연기관도 조직 비대화에 따른 방만 운영과 예산낭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에 폭염경보까지 더해져 도민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지사의 사퇴 일정에 대한 갖가지 얘기로 시국이 정말 어수선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도정과 의정의 안정적인 운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좌 의장은 “도민들이 어느 때보다 지치고 어려운 시기다”라며 “제주도와 도의회가 도민을 보듬고 살피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분 발언

“사모펀드가 운영한 준공영제, 공영제 시행이 답”

고은실 의원

제3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은실 의원(**사진**·정의당, 비례대표)이 버스 완전 공영제의 실시를 제안했다.

고은실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제주도가 최근 고발한 서귀포 버스업체의 경영권을 사모펀드가 행사하고 있다면서 문제된 상황을 설명했다.

고 의원은 수익을 우선시하는 일반적인 사모펀드의 속성상 배당금 확대가 교통편의 증대나 버스 노동자 처우개선, 사회 재투자보다 우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타지역에서도 공적자금으로 수익이 보장된 버스회사를 사모펀드들이 공격적으로 인수하는 상황과, 영업이익보다 큰 규모의 배당금 잔치로 문제가 된 서울시 사례를 들어 문제의식을 밝혔다. 고 의원은 사모펀드의 투자전략에 따라 공적자금으로 가치를 올린 버스회사를 되팔 경우 그 피해는 도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면서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된다”고 경고했다.

그에 따라 고의원은 준공영제 버스회사의 경영권 매각시 행정과 협의할 수 있는 조례 개정, 사모펀드의 경영관여에 의한 공공성 훼손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버스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의 책임을 묻고, 버스업체들에 대한 전면 감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고 의원은 이같은 조치와 별개로 버스 완전 공영제 실시가 궁극적인 해결방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지방자치 발전·지역현안 관련 4개 안건 처리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 제9대 전반기 제8차 정기회 제주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장) 제8차 정기회가 6월 25일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메종 글래드 호텔 2층 제이드홀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중 15개 시도의회가 참석한 가운데 고영권 정무부지사와 박주용 부교육감이 자리를 함께해 정기회 개최를 축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의과대학의 지역 환원 촉구 건의안’ 등 4개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한 제주포럼 의회세션에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들이 참관하여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등 세션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정기회가 다양한 지역현안을 다루어 전국적인 차원에서 연대를 통해 주민 공감대를 이루며 실질적인 대안을 창출해 나가는 활발한 활동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실무기구로서, 한달에 한번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폭넓은 소통의 장으로써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어려움 공감

제주도와 정책협의 및 조례 제·개정 노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7월 7일 의장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와 민생 토론을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철)에서 제주 지역제품 우선 구매 확대, 각종 공과금 유예 또는 감면, 소상공인회관 건립, 업종별 명인발굴 및 교육지원, 소상공인 코로나백신 우선접종 등 코로나19 극복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에 좌남수 의장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의회가 나서겠다.”면서 “시행상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 적극 개선할 것을 주문하겠고, 지역구 의원 및 정당들에게도 동참할 것을 주문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

道금고 "수익성·공익성 균형적 고려" 촉구

보조금심의위원회 월권도 지적

제39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7월 19일 제39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도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심사를 통해 수익성과 공익성을 골고루 고려해 도금고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원예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특성, 지역경제 생태계, 공익적 관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허 실장은 적절한 재원 배분과 선의 경쟁을 유도방침을 설명하면서도 경쟁 금융기관간의 금리경쟁 효과가 미미한 기금 금고 지정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번 도 금고 지정시 이자수입 확대를 주문하는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기금을 특별회계와 동일 금고에 예치하는 일반적 관행을 보다 높은 기금 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을 지정했다. 그에 따라 현재 일반회계와 기금은 농협이, 특별회계는 제주은행이 금고로 선정된 바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관련,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월권도 지적됐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의회심사가 완료된 예산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내용과 금액을 변경한 사례를 예로 들며, 심의위원회의 권한밖 행위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임시회 기간중인 7월 16일 제주청년센터를 찾아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악의 폭염, 저소득층 서민 대책 마련 급하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이 사상 최악의 폭염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철남 의원은 7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폭염에 대비한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 달 넘게 33도 이상 지속됐던 지난 2018년을 뛰어넘는 최악의 폭염이 닥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 요즘 전국 곳곳에서 폭염주의보가 연일 발령되고 있다"면서, "가마솥 더위에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지표면 온도가 높아져 주변 지역에 비해 단순히 기온이 상승하는 '열섬' 현상을 뛰어넘어 두 고기압이 햇볕을 받아 반원 모양의 열막이 형상돼 그 안에 뜨거운 공기를 가둬놓는 이른바 '열돔' 현상으로 한반도 전체가 끓어오르고 있다는 기상청의 분석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그는 무더위 쉼터를 개방하고 양산 쓰기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홍보를 비롯해 각 부서별로 폭염 예방을 위한 관련 대책을 꼼꼼히 점검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자치경찰위에 교육청 공무원 왜 없나"

제주형 치안서비스를 총괄하는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 사무국 구성에 교육청 인력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등 청소년 관련업무에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7월 19일 오전 제397회 임시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안전위 소속 도의원들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계획과 관련 자치경찰 체감을 위한 주민참여 및 치안활동 강화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관련한 청소년 범죄 및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관련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구성에 제주도와 국가경찰, 자치경찰단에서는 서기관급 인원이 파견되고 있지만 도교육청 인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교육청에서 5급 1명과 6급 1명 등 2명을 파견하려고 하고 있지만 6급 2명만 파견 받겠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는 "자치경찰제의 주된 목표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여성, 노인 등을 보호하는데 있듯이 교육청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기존 경찰의 역할을 보다 세밀하게 해야 한다"면서 교육청 공무원의 파견 필요성을 지적했다.

"제주안심코드 관광객 무용지물 QR코드 혼용해야"

김대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7월 15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제39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최근 제주국제공항에서 지켜봤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면 제주안심코드 설치 홍보를 10초 가량만 하더라"며, "관광객은 마음이 들떠서 귀에 들리지 않는다. 아무런 홍보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공항 입국장에 내려서 체온을 체크하는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어가 안된다. 형식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관광객 대부분은 제주안심코드가 아닌 수기로 작성한다. 엉터리로 적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육지에서는 수기 작성은 안된다.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이 절대 불가능하도록 철저히 하고 있다"며 "제주에 수많은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어 QR코드를 혼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관광객들에게 강제성을 띨 수 없다. 높은 시민의식을 기대한다"며 "제주도 인력 여러 분야에 분산돼 어려움이 있다. 조금이라도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알아달라"고 말했다.

환경도시위원회

상하수도 요금 인상 제동…"도민 부담 가중"

제주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5년까지 단계별로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상하수도 조례개정안이 심사 보류됐다.

환경도시위원회는 7월 19일 제39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조례 개정안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5년까지 3차례에 걸쳐 월별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단계별로 평균 10.8%, 30.5%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수도 요금은 현재 t당 470원에서 2021년 10월 520원, 2023년 1월 580원, 2025년 1월 640원 등으로 인상된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재 t당 420원에서 2021년 10월 550원, 2023년 1월 720원, 2025년 1월 94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큰 폭의 요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양병우 의원은 "만성 적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우선 도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요금을 인상하면 상수도는 현재 요금 대비 2025년 136%, 하수도는 221%에 달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025년까지 3단계 요금 인상을 한꺼번에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지속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요금 인상, 인상 폭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결정한다고 밝혔다.

동광리 일원 공동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사 보류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7월 19일 제39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의했다.

민경삼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장과 강아무개 사업자 대표,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동·효돈동·영천동) 은 "도로 상황을 봤을 때 정상적인 공사가 진행될 거라고 보나?"라며 "도로가 기형적인데, 이거 통과하면 난리가 난다. 통과하기 전에 건설과와 건축과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경삼 국장은 "내가 봐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다"라며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입구에서 오른쪽(남쪽)으로 가려면 동광마을로 들어간 후 몇km를 을 돌아야 한다.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여기에 건축물이 들어서면 주변 농지에 침수가 발생할 것 같다"라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심의를 마치고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안전선 확보 ▲용수·오수·우수·중수 처리 등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안건을 심사보류했다.

한편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제397회 임시회 기간중인 7월 15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부지 현장을 방문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실내 영상스튜디오, 현대미술관 현장 방문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지난 7월 15일 제주시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 현장방문에 이어 7월 19일에는 두 번째 현장방문에 나섰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제주시 한경면에 소재한 제주 실내 영상스튜디오 조성에 따른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대미술관의 실감 콘텐츠 영상관 운영사업에 대해 현황을 청취했다.

안창남 위원장은 "제주의 영상 촬영과 제작 지원을 위해 실내 스튜디오와 야외 촬영장 등의 시설을 갖춘 제주 실내 영상스튜디오가 오는 8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실내스튜디오 운영을 활성화해 제주 영상문화의 진흥과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주의 풍부한 로케이션 자원과 연계운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을 활용해 기존 미디어아트와 차별화된 몰입형 영상관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향후 시범적인 무료운영에서 유료관람으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전시 콘텐츠 확대를 통한 국내외 작가들의 참여 활성화뿐만 아니라 예술과 과학이 어우러진 차별화된 예술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블루 극복-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토론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월 9일 소회의실에서 "코로나 블루 극복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문경운 의원은 "제주도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지이며 동남아시아 해양레저관광을 잇는 길목에 위치해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발전에 가교역할과 수도권, 동해안권, 서해안권, 다도해권, 동남권, 한려수도권, 제주도권 등 7개 권역과의 네트워킹(networking)으로 공동대응 등 해양레저관광 발전에 협력하기 위해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해양대학교 조우정 교수는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여가활동이 치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해양수산 자원을 이용한 체험 중심의 해양레저와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의료가 융복합된 해양치유센터 조성과 관련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제주해양레저관광 입지에 대한 스왓(SWOT)분석과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제주도가 해양레저와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이며, 해양레저산업체,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해안 도시 간 일률적인 정책으로 경쟁이라는 부작용보다 지역의 대표브랜드를 육성하고 지역 간 연계하는 세일링 대회 개최 등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지원책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문경운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콘텐츠 상품들이 제시되었으나, 우선 이런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며, "제주 특성에 맞는 해양레저와 관광, 휴양, 문화의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해양치유센터와 체험센터 등 해안지역 경제 중심지 육성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꽃 피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재해예방 사업장·코로나블루 치유시설 찾아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 조천읍)는 7월 20일 제397회 임시회 회기 중 현장방문 일정으로 여름철 재해예방 사업장 및 1차 산업 분야 코로나 블루 치유 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여름철 갈수록 대형화 되는 가뭄 및 홍수 등의 예방 시설인 함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1차산업 분야의 치유기능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치유 프로그램 운영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산림치유 시설을 선정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는 이날 오전 첫 번째 방문지로 함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장을 방문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현장 설명을 통해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1년간 612억8천만원의 국비를 투입, 구좌읍 송당공구와 조천읍 함덕공구에 저수지 2개소(저수량 920천㎥)와 저류지 2개소(718천㎥), 양수장 1개소, 관정 1개소, 용수관로 12조(27.39㎞) 등의 공정으로 현재 막바지 공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말 모든 공정이 마무리 되면 구좌읍과 조천읍 지역 421가구, 농경지 800ha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경지 이용률도 기존 108.%에서 110.6%로 2.7% 상승하고, 21억7천300만원의 경제 수익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저수지와 저류지를 함께 시공해 집중호우시 하류지역의 침수피해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농수축경제위는 이날 오후 두 번째 현장방문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치유 프로그램 운영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서귀포 치유의 숲을 방문하고 운영현황을 청취했다. 농수축경제위 소속 의원들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을 통해 농업과 해양산

업 부문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앞으로 1차 산업의 치유기능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현길호 위원장은 "함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여름철 가뭄 및 홍수 등 매년 반복되는 재난재해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농업과 해양부문의 자연치유 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등 새로운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역차별 등 제주 농업현안 대책 모색

현길호 위원장, 농업인단체협의회와 정책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6월 9일 소회의실에서 농수축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회 상반기 회의를 개최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금까지 농·수·축·경제분야의 현안 사항과 주요업무보고, 안건심사 등을 의정자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농수축경제위원회 상반기 활동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의정자문위원들과 함께 상임위 의정활동에 대한 제도개선 등 의정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의정자문위원 제도개선 사항(서면제시), △ 상임위 주요 안건 심사 현황, △ 당면 지역현안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방향 및 의견수렴, △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내용, △ 향후 의정자문위원회 운영방향 등이다.

현길호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지역경제와 당면 현안문제를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의정자문위원의 고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향후 정기적인 농수축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지속적(년 3회)으로 실시하여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정발전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수축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회는 지난해 9월 16일 분과 의정자문위원장(고양순 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며 그 밖에 6명의 의정자문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2학기 전면등교, 교육당국의 대응 전략 절실"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 교육의원)는 2학기 전면등교 수업을 앞두고 여름방학 기간을 잘 활용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대응전략 등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부공남 교육위원장(제주시 동부)은 7월 16일 열린 제3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2021학년도 2학기 전면등교 추진 계획'에 관한 현안을 보고 받고 "2학기 전면등교 핵심은 과대학교의 거리두기, 급식문제, 방역문제로 요약될 것 같다."면서, "제주만은 2학기 전면 등교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도 "올 여름방학이 제주도교육청이 가장 긴장하고 바빠야 할 것 같다"며, "전면등교 대비 대응태세를 잘 갖춰달라"고 강조했다.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선거구)은 제주도교육청이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과 학부모는 전면 등교에 전국 평균보다 찬성 의견이 높은 반면, 학생들은 전국평균보다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제주의 아이들이 타 지역보다 전면 등교를 원하지 않는 것은 방역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우려하는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영봉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데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영진 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은 제주도내 학교 교직원 1만7천92명의 교직원 중에서 개인 사정으로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질의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개학 전 1주와 개학 후 2주를 집중방역 주간으로 설정해, 학교방역 이완 방지 조치 및 현장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재난발생 시 학부모회 총회를 비대면으로

부공남 교육위원장 등 조례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 교육위원장(사진·교육의원)은 도내 각급학교의 학부모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397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학부모회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단위 학교 학부모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학부모회의 실질적인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루어 있다. 특히, 학부모총회 의결사항 중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부공남 위원장은 "비대면 방식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 초 일선학교에서 학부모회 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학교 실정에 맞게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 현장에 교육주체의 일원으로서 학부모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부공남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민구, 강성민, 고현수, 강민숙, 문종태, 송영훈, 김대진, 김경학, 이상봉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7월 16일에 예정되는 제397회 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조례소개

전국 최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강민숙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국 최초로 발의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민숙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일회성 지원사업으로 끝나는 것을 우려하였고,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관계자, 관계공무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6월 30일 열린 제39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에 정주기반 및 경제활성화를 통해 도시재생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금년 원도심지역의 모관지구와 일도동 신산모루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를 앞두고 있으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안이 없는 현실이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이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 완료 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활성화계획에 따른 사업이 지속되지 않거나, 재쇠퇴가 예상되는 경우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경용 의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과수 시장에서 감귤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버려지는 귤피(귤껍질)를 활용하여 산업화하는 내용이 담긴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발의되어 제정됐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용 의원(**사진**·국민의 힘, 서홍동, 대륜동)은 제397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귤피의 정의와 귤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귤피의 생산과 가공사업 등 지원 대상 사업과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품질인증 제도의 도입 등으로 산업화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경용 의원은 "귤피를 단순하게 감귤에서 유래되는 한약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기능성 원재료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라는 접근을 통해 제주 감귤이 새로운 변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오영희 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사진**·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했다.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 있으며,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관리부서의 분산, 총괄부서의 부재로 인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조례 내용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총괄부서를 도·행정시 체육시설 담당부서로 하고 별도 관리부서를 두도록 하고 있다. 야외운동기구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와 사전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외운동기구의 안내문 게시와 안전점검 계획수립에 따라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임정은 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및 소상공인 관련단체 사업의 예산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개정조례안을 제397회 임시회에 대표발의했다.

임정은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19로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등을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차례 논의했고, 이를 입법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사업 및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등의 상거래 현대화 지원을 신설하였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에 소상공인의 날 개최 및 상품박람회 지원 근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임정은 의원은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제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생존권 위기에 놓인 도내 소상공인 경영생태계 회복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송창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제3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제주교육환경 안전에 기여하고자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안 제3조), 방연물품의 홍보 및 교육(안 제4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토론회

4·3기념사업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하자

강철남 위원장, 조례 제정 전문가 좌담회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연동 을/더불어민주당)은 「제주4·3기념사업 지원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7월 6일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문가 좌담회는 2018년 제주 4·3 70주년을 기점으로 기념사업의 종류와 사업량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중복적 지원 및 성과 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따른 4·3유족 및 도민 체감도와 효과가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에 편성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민간이전 예산은 본예산 기준 2018년 46.2억원, 2019년 22.4억원, 2020년 24.6억원에 이르나 이들 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편성 및 운영, 성과평가 등이 실시되고 있어, 4·3기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기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성과평가에 관해 별도의 심의를 진행할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조례를 준비 중인 강철남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본 조례 제정을 준비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4·3기념사업의 축소 및 4·3유족 및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 마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연된 측면이 있다"면서, "4·3특별위원장으로서 민간에서 실시되는 4·3기념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4·3기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사와 평가가 별도로 진행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도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4·3기념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위한 지원기반 조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은 7월 8일 소회의실에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작은도서관의 역할은 독서증진과 더불어 생활문화 향상에 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하면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지지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한 것처럼, 주민자치의 문화기반시설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주에는 현재 총 45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 20개소인 45%는 운영에 대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황국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지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이다. 작은도서관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협회의 안정적 운영과 미지원 작은도서관의 체계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조례 개정을 준비하게 되었고, 조례 개정에 앞서 실질적인 정책개선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훈배 대표의원, 임정은 부대표의원 선출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정기총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는 7월 14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의원에 조훈배(더불어민주당, 안덕면) 의원을, 부대표의원에 임정은(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의원을 소속 회원의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신임 조훈배 대표의원은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자원의 보전과 활용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아울러 미래세대를 위한 제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연구 활동 및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 받고 의결했다.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제주 자연환경의 보전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지난 2010년 7월 8일 9대 의회 때 창립되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농수산물 활용 성게 양식기술개발 전문가 차담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 선거구)은 7월 16일 의원실에서 농수산물을 활용한 성게 양식기술개발을 위해 해양수산연구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마을 어장의 주요 소득원인 성게 자원의 감소로 인한 새로운 양식 성게 소득화 방안 모델 연구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성게 양식 먹이원으로 양배추, 괭생이모자반, 구멍갈파래 등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성균 의원은 "도내 해녀들이 잠수하여 직접 채취한 성게가 알이 없어 판매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고부가가치로 유통되는 성게 자원의 갯녹음 현상으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연구원 고형범 원장은 "미활용되는 농수산물을 활용한 성게 시범양식 추진을 통해 미역, 양배추, 구멍갈파래, 괭생이모자반 사료를 이용하여 성게의 먹이 선택성 및 급이량, 생식소 발달상태를 연구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농업 현안 해결과 미래 위한 정책간담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주시 농촌지도자들과 농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김경미 의원은 7월 8일 삼양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된 '위성곤 의원 초청 농업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공익형직불제와 탄소농업도입, FTA기금제도 개선 및 농산물 물류비 문제 등 제주 농업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경미 의원은 "제주지역 1차 산업은 섬이라는 조건불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화성을 잘 유지해 왔지만, 무분별한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과 기후변화 및 과학기술의 뒷받침으로 인해 육지부 농산물과도 경쟁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농가부채 증가와 농가소득 둔화가 눈에 띄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 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제도개선 사항을 잘 듣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 농해수위에 계신 위성곤 의원께서도 참석하시는 자리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개선과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협력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 제주시협의회(회장 김창영)가 주최하고, 동부지구회(회장 홍왕유)가 주관한 행사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됐다.

신기한 제주어 ❼

칭원ᄒᆞ다

(동사) 분하고 억울함을 말하다

<예문>

경ᄒᆞᆫ디, 일화가 쉐번 ᄒᆞ는 날 목장이서 그 알동네 큰 쉐가 일화신더레도 뿔질ᄒᆞ젠 ᄒᆞ는 거라. “우리 주연신더레 왜 경ᄒᆞ나!” 부룽이도 부에가 난 그 쉐신더레 뿔 내밀멍 돌려들엇주. 찔레부뜬 거주. 부룽이도 심 다 내연 머리로 다댁이곡 밀곡 “씩, 씩, ᄒᆞᆫ 번 헤보자” ᄒᆞ엿주. 겐디, 아멩ᄒᆞ여도 이녁보단 큰 쉐라노난 부룽이가 버쳔, 칭원ᄒᆞᆫ ᄆᆞ음으로 홀 수 읏이 등 돌련 돌아날 수벢이 읏엇주.

‘도의회 광장’에서는 2021년부터 양전형 님의 ‘제주어용례사전①’에 실린 제줏말이 600여 예문 속에 쓰이는 용례를 게재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경ᄒᆞᆫ디 : 그런데
쉐번 : 소당번
뿔질ᄒᆞ다 : 뿔로 받거나 받으려 하다
주연신더레 : 주인에게
경ᄒᆞ나 : 그렇게 하느냐
부에 : 화
쉐신더레 : 소에게
내밀멍 : 내밀면서
찔레, 쉐찔레기, 쉐찔레, 찔레기 : 소싸움
다댁이다, 다대기다, 다닥이다 : 다닥치다, 부딪치다
돌려들다, 돌펴들다 : 달려들다
찔레부뜨다 : 소싸움이 붙다
심 : 힘
내연 : 내서
밀곡 : 밀고
겐디 : 그런데
아멩ᄒᆞ여도 : 아무리해도
이녁보단 : 자기보다는
쉐라노난 : 소이기 때문에
버치다, 제우다, 젭다 : 버겁다
칭원ᄒᆞ다 : 원통함을 말하다
읏엇주 : 없었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일정

월별	회수	회 기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계	10회	총142일 · 정례회 2회/47일 · 임시회 8회/95일	본회의 28일 상임위 55일 예결위 22일 공휴일 37일	
2월	제392회 임시회	2.22.(월) ~ 3.4.(목)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공휴일 3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결산검사위 원 선임 · ’21년도 주요업무 보고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3월	제393회 임시회	3.17.(수) ~ 3.25.(목) (9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월	제394회 임시회	4.20.(화) ~ 4.30.(금) (11일)	본회의 6일 상임위 3일 공휴일 2일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5월	제395회 임시회	5.28.(금) ~ 6.9.(수) (1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예결위 3일 공휴일 4일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6월	제396회 제1차 정례회	6.15.(화) ~ 6.30.(수) (16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예결위 5일 공휴일 4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제397회 임시회	7.14.(수) ~ 7.21.(수)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9월	제398회 임시회	8.26.(목) ~9.7.(화) (1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예결위 3일 공휴일 4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399회 임시회	10.12.(화) ~11.3.(수) (2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5일 공휴일 6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400회 제2차 정례회	11.15.(월) ~12.15.(수) (31일)	본회의 6일 상임위 8일 예결위 9일 공휴일 8일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22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401회 임시회	12.17.(금) ~12.23.(목) (7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공휴일 2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긴급 회의소집, 회기연장 운영 등을 위한 예비일 : 13일

생활 & 법령뉴스

감염병 방역지침을 1회만 위반해도 영업정지 10일에 처해집니다.

7월 8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출입자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한번만 위반해도 경고 없이 영업정지 10일에 처해지는 등 처분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식당이나 카페 등의 사업장에서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등 시설 관리에 대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1차 경고, 2·3·4차 운영중단(10일, 20일, 3개월), 5차 폐쇄명령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확산이 줄어들지 않고 심각하게 확산된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7월 8일부터 처분이 한 단계씩 강화되었습니다.

방역지침 위반횟수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처분	
	7월 7일 이전	7월 8일 이후
1차 위반	경고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폐쇄명령
5차 위반	폐쇄명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으로 2021년 7월 8일부터 방역지침을 한번만 위반해도 경고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 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들은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처분 강화에 대한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신고 및 지원에 관하여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Q&A

Q 직무관련자인 공직자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의 예약 또는 공공기관 소속 콘도형연수원 예약을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다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합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제공 등 일체의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므로 골프장 및 콘도 예약 편의 제공도 금품등에 해당되고, 이를 부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에 대한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사안과 달리, 민간골프장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예약을 부탁하는 경우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한 청탁이 아니므로 부정청탁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기고

먹거리 공공재 가치 높이는 기회로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 식량안보가 대두되고 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 식료품 가격이 40%까지 폭등해 수천만명이 굶주림에 노출되어 있다. 의료는 코로나19로 더욱 더 공공재로 인식한 반면 먹거리는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임에도 공공재 인식이 부족하다. 코로나가처음 발생할 당시 식료품 사재기,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장발장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먹거리도 의료처럼 공공재 역할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본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018년 기준 21.7%로 OECD 국가 중 식량 해외 의존도가 가장 높다.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시장 상황에 따라 곡물 시장 국내 가격은 널뛰기가 될 것이다. 아직까지 음식물쓰레기가 연간 500만톤 이상 나오고,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해도 저렴한 외국산이 많은 상황에서 무슨 식량위기냐면서 반문 하실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식량위기의 요인을 기후위기와 양극화로 규정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결국 자국민 보호를 위해 수출 금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는 방역을 위해 물류 이동 셧다운을 시행하기도 했다.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발생한 '아랍의 봄' 대규모 시위에 국민들이 합세한 이유 중 하나는 2007년부터 급격하게 오른 식량가격 때문이다. 아랍 국가들은 전체 식량 소비의 56%를 수입하고 있어, 식량가격 상승은 국민들 생계에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이다. OECD 국가 중 식량 해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이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먹거리 기본권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의제이다. 내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도 이와 관련한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먹거리를 공공재로 보는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 무상급식이다. 이러한 공공재 먹거리 정책을 위해서는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 유통 단체의 상생구조와 더불어 지방자치와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 해줘야 한다.

현재 제주는 '제주먹거리 전략 수급 추진 계획' 용역이 마무리 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 추진 안에 제주먹거리가 공공재의 가치를 강화하려면 첫째,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꼼꼼하게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둘째,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지속가능한 제주농업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시대 먹거리 위기를 먹거리 공공재 가치와 식량자급률 높이는 기회로 바꿔내야 한다.

김경미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속 가능한 제주 해수욕장 방역대책 절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피서지인 제주가 위태롭다. 특히 야간에 관광객 및 도민들이 해수욕장 및 주변 해변으로 몰리고 있어 더 문제다.

탑동광장 폐쇄에 따른 풍선효과라는 해석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현장에서는 각종 취식물로 인한 쓰레기, 소음 등 불안한 코로나 정국에 새로운 지역사회 민원이 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도의회에서 지난 6월 14일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해양스포츠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역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선제적으로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타 지방에서는 안심해수욕장, 사전예약제 등으로 해수욕장 이용이 다소 불편할 거라는 우려와는 달리 불편에 대한 민원보다는 이용객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도 제주도 주요 밀집 해수욕장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적용할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다른 지방의 선행 사례는 벤치마킹하고, 제주적 방역체계를 더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 지적은 물론 필자도 확인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1일 해수욕장 일제 개장 후 일주일 동안 누적 이용객 수는 6만7647명이며, 제주시내 A해수욕장에의 경우 이 기간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은 143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 상황을 보면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제4차 유행이 현실화됐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도 연일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며 예사롭지 않다. 제주도가 바짝 긴장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확진자 연령을 보면 20~49세가 64.3%를 차지하고 있어 그들의 활동성을 감안한다면 언제든지 걷잡을 수 없을 상황이 예측된다. 다만 이런 감염경로가 지금까지 해수욕장으로 번지지 않았지만, 예외일 수 없다. 필자가 해수욕장의 위험성이 엄중하고 크기에 지속 가능한 해수욕장 방역을 입이 마르도록 강조하는 것이다.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심정도 이해하지만, 코로나19는 그 어떤 예외도 없는 공포이다. 지역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피해는 정작 도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퇴설이 나도는 원희룡 지사가 끝까지 최선을 경주해야 하는 책임이 여기에 있다.

올 여름철 코로나19로 지친 도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쉼터 제공을 위하여 완벽에 가까운 방역 대책을 만들자. 도민들도 남이 아닌 우리의 일로 생각해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자.

활을 잘 쏘려면 과녁에 집중하고, 북을 잘 치려면 소리 나는 지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나설 때다.

이승아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기고

1세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감면

올해 첫 재산세 고지서가 지난 13일부터 발송됐다. 올해 재산세는 많은 납세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과 우려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많은 수의 1주택 보유자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이? '지방세법'? 개정에 반영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고통받는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율특례가 한시적으로 신설되어 9억원 이하의 주택보유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과표 구간별 재산세율이 0.05%씩 인하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된 세액은 발송된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는 납세자들은 세율 인하효과가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를 상쇄시키므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들 수 있다.재산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보지만,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 합가하더라도 독립된 세대로 간주하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끝으로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나 사원용 주택 등 사업용에 해당되는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여전히 들쑥날쑥한 공시가격과 시세 사이의 괴리, 매년 복잡해지는 주택보유자의 세 부담 계산 등의 여러 가지 재산세 납세자들의 고충에 필자 역시 공감한다. 지자체와 납세자가 각각 추구하는 바는 매번 평행선을 교차할 때가 많다. 하지만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기에 납세자분들의 성실 납세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참고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8월 2일까지이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재산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지방세 ARS,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비대면 납부가 가능하다. 행여, 자금경색으로 기한 내 완납이 어려운 납세자들은 재산세 본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니, 이 역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황보회 주무관 / 노형동주민센터

밥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공로 인정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감사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위원장, 고은실 부위원장, 박호형 위원은 "밥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와 관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7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밥걱정 없는 제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면서, 이러한 기부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취약계층을 위한 의미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을 다해나가는 것이 도민들이 보여주신 고마움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들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정공백 등 현안 의회 여야 한목소리 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황국 원내대표가 7월 14일 오찬 회동을 열고 도정 공백, 지역 현안, 민생경제 등 세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협력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원희룡 제주지사의 사퇴에 따른 도정 공백 상황에서 정쟁보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정 공백 공동 대응 차원에서 원희룡 지사의 사퇴와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상설정책협의회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정과 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자·출연기관 지적 경영효율 높여야"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의존도를 낮추고 수익성 개선을 위해 새로운 고수익 사업 발굴과 경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월 19일 '2020년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결산·경영성과 평가' 현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 등 3개 공기업에 대한 2020년 대행 사업비는 752억원으로, 2019년 대비 33.8%나 증가했다.

또 제주연구원, 여성가족연구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테크노파크 등 1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액(출자·출연금+대행 사업비)은 1천540억원으로, 저년 대비 15.9% 늘었다.

세출 규모를 고려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액 비율은 제주가 2.6%로 충남(2.4%), 충북(1.5%), 전남(1.6%), 경북(1.7%), 경남(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공기관 대행 사업비가 1천471억원으로 17.3%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5.2%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영업수지 적자는 2019년 180억원에서 2020년 325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도의회는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의존도를 낮추고 수익성 개선을 위해 고수익사업 발굴과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4·3행방불명희생자 진혼제 봉행

제20회 제주4·3행방불명희생자 진혼제가 7월 17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 앞 위령제단에서 열렸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와 4·3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회장 김광우) 주관으로 봉행된 이날 진혼제에는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강철남 제주도의회 4·3특위 위원장,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등 주요 인사와 유족 등이 참석했다.

현재 평화공원에는 4·3 당시 도·내외 곳곳에서 희생된 행방불명인 3,976명의 개인 표석이 설치돼 있다.

입법평가위원회 비대면 화상회의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등 21건 입법평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2021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6월 30일 ZOOM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2021년도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총 93건으로서, 이번 제2차 평가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등 21건에 대해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15명(총 평가위원 20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코로나로 인하여 첫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회의 안건은 입법평가 대상 조례 21건 외에도 「2020년 자치법규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입법평가 분석지표 개선안에 대해 심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등 21건에 대하여는 개정필요 6건, 통합필요 1건, 개정검토 5건, 이행독려 4건, 기타 2건, 정상추진 3건으로 심의·가결되었으며, 두 번째 안건인 「입법평가 분석지표 개선안」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들로부터 분석지표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다음 회의시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에 양기철 이사관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에 이혜란 임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에 양기철 이사관(사진·왼쪽)이 임용됐다.

양기철 신임 사무처장은 지난 1996년 제1회 지방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최근까지 국제통상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관광국장을 역임했으며, 지방이사관 승진 이후 도민안전실장으로 근무하다 의회사무처장에 임용되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월 2일자로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총 4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에 이혜란 서기관(사진·오른쪽)이 발령됐다.

총무담당관 총무팀장 김정수·경리팀장 강미란·의사팀장 양경저·공보팀장은 지경주 사무관이 각각 발령됐다. 재정연구팀장은 강경순 주무관이 직무대리로 직위 승진했다.